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경제안보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경제안보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트럼프 대통령, “美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서명(4.9)
- 중국, 美 추가관세 위협에 대한 재보복 조치 발표(4.9)
- USTR, 中 해운사 및 해외 자동차 운반선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4.17)
- 美 상무부, 반도체 ·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4.1.)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임산호 선임전문관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01

1. 유럽방위백서 및 유럽 재무장계획/준비태세2030 발표
2. EU 회원국 및 산업계 동향
3. 유럽의 방위산업 계획이 우리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

II. 경제안보 현안

이재원 선임전문관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합의

15

1. 배경
2. 주요 내용
3. 합의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김단비 전문관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22

*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Aidan Powers-Riggs. (2025.3.)
“Ship Wars: Confronting China’s Dual-Use Shipbuilding Empire”. CSIS.

1. 중국 조선산업의 안보적 위협 : 이중용도(dual use) 구조의 작동 방식
2. 정책 제언 : 경제 · 군사적 측면을 고려한 조선산업 정책 수립 필요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트럼프 대통령, “美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서명(4.9)
- 중국, 美 추가관세 위협에 대한 재보복 조치 발표(4.9)
- USTR, 中 해운사 및 해외 자동차 운반선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4.17)
- 美 상무부, 반도체 ·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4.1.)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선임전문관

요약

■ EU 집행위, 최근 유럽방위백서(White Paper for Europe Defense - Readiness 2030) 및 유럽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Readiness 2030) 발표 (3.19)

- 유럽방위백서는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핵심 전력 격차 해소 방안과 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제시
- 유럽재무장계획은 EU 방위자금을 8,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조달방안 제시
 - 특히 SAFE라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최대 1,500억 유로의 대출을 회원국에 제공하는 ‘SAFE 이니셔티브’는 EU 회원국 외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도 별도 협정을 체결할 경우 완화된 조건으로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주목

■ 세부 방안의 불확실성과 회원국 간 이견은 존재하지만, EU 방위비 지출 확대와 역내 방위산업 강화 계획은 회원국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

- 3.20일 EU 이사회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유럽 재무장 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
- 민간자본 유입을 장려하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방산부문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제약도 다소 유연해질 전망

■ 유럽 기업들은 방위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군수산업에 진입 중

-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 악화와 전기차 전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방위산업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

* 탄약제조업체 라인메탈(Rheinmetall)은 폭스바겐 공장을 인수해 장갑차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센서 전문기업 헨솔트(Hensoldt)는 콘티넨탈(Continental) 및 보쉬(Bosh)에서 해고된 엔지니어 채용 논의 중

■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통해 굳건한 동맹국 위치에 있으며 빠른 생산 및 조달 역량이 강점인 우리 방산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

- EU의 자체 생산 강화 목표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현 무기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생산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 수요는 한동안 증가할 전망
- 장기적으로는 역내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유럽산 방위제품 선호로 인해 우리 방산 수출에 위협으로 작용 가능

■ 역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보호주의적 기조가 확대되면서 우리 방산기업들도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

- 현지 생산 방식이 확대되면 완제품 수출방식과 대비했을 때 국내의 방산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입 의존이 높은 원천기술 내재화, ▲공급망 다각화,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강화 필요성이 제기

1. 유럽방위백서 및 유럽 재무장계획/준비태세2030 발표

■ 유럽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제시한 유럽방위백서 발표(3.19)

- EU 집행위는 3.19일 유럽방위백서(White Paper for Europe Defense - Readiness 2030)*, **를 발표했으며, 백서에서는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격차 해소 방안과 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제시

* 유럽방위백서는 지난 2024년 7월 18일 발표된 집행위의 5개년 계획 『유럽의 선택(EUROPE'S CHOICE) 2024-2029』 문서에서, 집행위가 취임 100일 이내(2025년 3월 11일) 발표하겠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문서는 2025년 3월 19일에 발표

** ‘유럽방위백서’ 전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참고 1> 참조

- 백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행동 방향을 핵심 목표로 제시

- ① 중대한 전력 격차를 시급히 해소하고, 규정 간소화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유럽방위산업의 생산 속도와 규모를 대폭 확대
- ② EU 전역에 단일 방위시장을 구축하고 AI·양자기술 등 파괴적 혁신을 활용해 국방 분야의 변혁을 가속화하고 미래 대응력 강화
- ③ 군사적 이동성 개선, 비축물자 확대, 작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유럽이 최악의 군사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태세 강화

■ 8,000억 유로 방위자금 조달방안 제시한 유럽재무장계획 발표 (3.19)

- 집행위가 방위백서와 동시에 발표한 유럽재무장계획(ReArm Europe Plan /Readiness 2030)* 제안은 총액 8,000억 유로 규모의 신규 방위자금 조달 계획 제시

* ‘유럽재무장계획’ 전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참고 2> 참조

- 재원 조달방안은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

- ① 국가 재정규율 면제조항 활성화를 통해, 회원국이 국방에 공적 자금 사용을 보다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전담기구인 SAFE(Security and Action for Europe)를 설립해 자본시장에서 1,500억 유로를 조달하고 이를 장기 대출 형태로 회원국에 제공
 - ③ 결속기금(Cohesion fund) 등 기존 EU의 예산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
 - ④ 저축투자연합(Saving and Investment Union) 전략을 통해 민간저축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방위 부문에 투자하도록 환경 조성
 - ⑤ 유럽투자은행(EIB) 그룹이 국방·안보 분야 대출 확대를 지원해 민간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위부문에 유입
- 이 중 SAFE를 통한 1,500억 유로 규모의 자금 조달 방식은 EU 가입국뿐만 아니라 후보국, 잠재 후보국, 그리고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한국 포함)까지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
 - 집행위원회는 유럽재무장계획을 발표하면서 SAFE 설립을 위한 이사회 규정 초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이사회에서 가중 다수결 투표를 통해 채택이 결정될 것

2. EU 회원국 및 산업계 동향

■ EU 방위비 지출 확대와 역내 방위산업 강화는 회원국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지를 받는 중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올해 출범한 2기 집행위 이전부터 정책 최우선순위에 방위산업 부흥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EU의 방위비 지출 계획 규모도 여러 차례 확대
 - *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4.6월 기자회견에서 최소 5천억 유로가 향후 10년간 방위비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훨씬 늘어난 8천억 유로를 5년 뒤인 2030년까지 투자할 것을 주장
- 3월 4일 EU 집행위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선공개했으며, 6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EU 정상들은 집행위의 해당 계획에 합의했음을 발표
 - EU 정상들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인 안정성장협약(SGP)의 예외조항 발동을 지지한다고 발표
 - 정상들은 SAFE 신설을 통한 1,5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대출 계획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방위산업 지원 확대 계획도 지지
- 3월 20일 열린 정례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관련 이니셔티브의 5년 내 신속한 이행을 다시 강조했고, 3월 6일 발표된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행에 옮길 것을 강조

■ 방위비 확대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EU에서는 현재 유럽의 신속한 재무장 방안뿐 아니라 미국의 NATO 철수 가능성 대응 방안도 논의의 중심

-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NATO 회원국들이 낮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유럽 회원국들이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미국이 NATO에서 탈퇴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언급
 - 최근 브뤼셀을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NATO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동맹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고 언급 (4.4일)
 - NATO 조약 5조(동맹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든 동맹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에 따른 집단방위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NATO의 동맹국 간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유럽에는 미국산 무기 없이 현재 유럽의 재무장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존재하며, 이는 방위백서의 국제협력 부문(8장)에서 미국과의 공고한 대서양 방위 협력 관계 구축계획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통해 관찰
 - NATO 내에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ness)’이 새로운 축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영국 스티머 총리 등 정상들은 미국의 참여와 개입이 어떻게든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 (Euronews, 2025.4.10.)
- 일부 유럽 국가들은 NATO에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5~10년에 걸친 질서있는 책임 이양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 (Financial Times)
 -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 회원국 등 일부 EU 회원국이 주도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재정적, 군사적 부담을 유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6월 NATO 정상회담에 이를 미국에 제시하고 협상할 계획
 -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에 애초에 협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과 해당 논의가 미국의 탈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존재

■ 방위비 조달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위의 제안 외에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입을 장려하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방산부문 투자와 관련된 기존 제약도 다소 유연해질 전망

- 유럽 내에서는 EU 회원국 외에도 영국, 노르웨이 등 제3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국방채권(defence bonds) 발행도 대안으로 논의
 - 이 방안은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공동 국채가 아닌,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민간자본을 모아 국방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
 - 공동부채 형성에 부정적인 국가들도 거부권 행사 없이 불참할 수 있으며, 비회원국인 영국, 노르웨이 등 국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특징

- 민간의 방산투자는 ESG 기준에 따른 제약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 전례없는 방산 진흥계획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석유펀드는 방산기업 투자가 금지*되어 왔으나, 러-우 전쟁 이후 국방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윤리기준 재검토 필요성이 노르웨이 정치권 내에서 확대

* 이 기준은 2000년대 초 노르웨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핵무기나 집속탄 관련 부품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 이에 따라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등 주요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가 차단

- 자본시장에서 노르웨이 석유펀드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만큼 기준 완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으며, EU의 자금조달에도 유리해질 것

■ 유럽 기업들은 방위비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기 위해 군수산업에 진입 중이며, 시장둔화·전기차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기업들의 전환 가능성도 거론

- 최근 유럽 기업들에서 두 가지 경로로 방위산업 진입 확대가 관찰 : ▲민간기술의 군사적 용도 활용 가능성을 보고 기존 민간기업이 방산업계로 신규 진입, ▲전기차로의 전환 부담과 수요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중심으로 군수용 생산으로의 전환·확대 추진

- 단순히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빠른 납품능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민간 경제자원을 군비 증강에 활용하는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

-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 악화와 전기차 전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방위산업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 시장의 숙련된 제조인력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위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 확대

최근 유럽 기업들의 방산부문 전환·강화 동향	
독일	탄약제조업체 라인메탈 Rheinmetall -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과 자동차 근로자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MOU 체결(24.6월)하고 직원 채용 제한 - 폭스바겐의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인수해 장갑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센서 전문기업 Hensoldt - 콘티넨탈 및 보쉬(Bosh)에서 해고된 엔지니어 채용 논의 중
	KNDS(독일-프랑스 합작법인) - 프랑스 철도제조업체 Alstom에서 철도공장 인수해 레오파르트 2전차, 푸마 보병전투차 등 부품 생산 위해 개조 중
스웨덴	자율주행기업 Einride - 자율주행 물류기술의 군사용도 도입을 위해 군 당국과 논의 중

-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방위산업 진출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6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Reuters)

■ 일부 전문가들은 예산 조달 자체보다는 향후 예산의 집행 방식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효율적인 방위물자 조달과 내부 경쟁 촉진을 위해 단일방위시장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EU는 시장 분열, 기술 격차, 규모의 경제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 중
 - 국가별로 방위조달이 이뤄지면서 중복투자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첨단 무기시스템 개발이 뒤쳐져 있고, 소량 생산으로 인해 무기생산 단가가 높음
-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무기 구매 방식, 대상 기업 선정 등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합의 지연이 우려
- 무역마찰과 비표준화된 행정절차 등이 방위산업 공동조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제품 인증의 상호 불인정, 군수품 이동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 비표준화된 세관 처리 방식, 역내 방위물자 이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
-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단일방위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며, 여러 국가가 이미 방위산업을 면허요건 등 별도 규제 체계하에 관리 중인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

■ SAFE 이니셔티브에 제3국 참여 관련 쟁점

- EU 내에서는 제3국 방산기업의 SAFE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해당 논의가 회원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SAFE 이니셔티브 내용

- SAFE라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최대 1,500억 유로의 대출을 회원국에 제공
- 회원국들은 공동조달을 통해 국방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EU 예산으로 보증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국가 차입보다도 오히려 신뢰성이 있고 장기 대출로 진행
- 대출금을 사용해 공동조달을 할 때 최종제품의 비용 중 65% 이상이 연합, 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되도록 해야 하며, EU의 안보·방위 이익을 해치는 국가로부터의 부품 조달은 불가
 - * EEA(EU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공동조달은 최소 두 국가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해야 하며, EU 후보국, 잠재적 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3국*도 공동조달에 참여 가능
 - * 한국, 일본, 노르웨이,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 SAFE 규정 초안은 방산물자 공동조달 시 ▲완제품 가격 기준 65% 이상 역내 생산 ▲생산업체 시설의 역내 소재(상세 비율 불명시) 등을 요구하나(16조), 한국 등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별도의 양자 또는 다자 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상기 요건을 일부 완화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17조)

* 현재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6개국(한국, 일본, 노르웨이,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 이외 영국, 캐나다도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을 논의 중

- 아울러, 해당 양자협정 및 다자협정을 통해 역외국의 재정적 기여도 합의되어야 한다고 명시
- 단, 현재 SAFE 규정 초안은 ▲협정 체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역내 생산 요건 완화의 수준 ▲역외국에게 요구되는 재정적 기여의 수준 등을 정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EU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

3. 유럽의 방위산업 계획이 우리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

■ 유럽은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방위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며, 이러한 기조는 우리 방산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현재 유럽의 방위산업은 다른 산업군의 제조설비를 방산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받고 있으며, 방산 공급망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기반으로 강화하려는 추세
 - 트럼프 대통령의 NATO 탈퇴 위협하는 등 최근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의존도 감축이 연합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
 - 자체 생산역량 강화라는 목표에 따라 향후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나 유럽의 무기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단기간에 생산역량이 확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통한 수요는 단기간이나마 계속 늘어날 전망
 - 방위백서에서 빠른 생산 및 조달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된 만큼, 제조 역량을 갖추고 EU와의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통해 굳건한 동맹국 위치에 있는 우리 방산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에 따른 실적 증가는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방산업계에 공통된 호조로 향후 튀르키예 등 후발주자들과 경쟁이 예상
 - 첨단 방산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전통적 무기체계는 중장기 성장에 한계
 - 튀르키예와 같이 우리 방산제품을 수입하여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후발국 주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한국 방산수출의 경쟁자로 부상 중
- 유럽의 역내 산업 육성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계약 확보에 장기적 제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들은 중동 및 동남아 등 국방예산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다각화를 모색 중
 - 장기적으로는 역내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유럽산 방위제품 선호로 인해 우리 방산 수출에 위협으로 작용 가능

■ 우리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은 더욱 강화될 전망

- 공동조달 시 EU 회원국과 협력 필수, EU 역내 생산비율 65% 이상 만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호주의적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방산기업들도 현지 생산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

- 현대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방산업체 WB 그룹과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사(JC) 설립 검토 중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를 유럽의 첫 현지화 기지로 삼을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내에 K9 자주포 생산공장 착공을 계획 중
-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시설 운영을 검토 중으로 폴란드에 인도되는 K2 전차 2차 물량부터는 한국과 폴란드에서 동시 생산할 계획
- 한국항공우주, 폴란드에 FA-50 전투기 등 무기 수출 및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소재 공군기지에 직원 상주하고 관련 교육 진행, 폴란드 법인 설립 추진 중
- 현지 생산 방식이 확대되면 대기업들은 수출 증가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완제품 수출방식 대비 방산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현지 기업으로 공급망이 대체되면서 국내 방산기업의 육성 기반이 약화되고 국내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산수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천기술 내재화, ▲공급망 다각화,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강화 필요성 제기
 - 원자재, 핵심 소재, 부품은 특정 방산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천기술의 내재화와 조달원 다각화 노력이 계속 요구될 것
 - 유럽 기업들과의 방산협력 확대 시 기술 내재화에 도움될 수 있는 기술협력이 필요하며, 핵심 소재·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후방산업의 육성이 중요
 - *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스터빈 엔진, 항공기용 탄소섬유, 메인 기어박스 등이 주요 수입 부품 및 소재에 해당(산업연구원, 2022)
 - K-2 전차, K-9 자주포 등 우리 방산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위제품들도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으나, 4차 공급될 K2 전차에서 파워팩 (엔진+변속기)의 완전 국산화*가 이뤄지는 등 성과
 - * 2025.2월, SNT다이내믹스가 방위사업청 상대로 변속기 공급계약 체결
 -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방산제품 공급망 관리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주요 제품의 공급망 전주기 분석과 공급망 사슬의 약한 고리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로 됨
 -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무기체계 특성상 MRO(유지·보수·재조립 등)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되며, 글로벌 무기체계 시장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해진 부분으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요구
 -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PIPIR) 협의체에서 한국이 MRO 분야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등 국제협력 부문에서 역할 확대도 MRO 부분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참고 | 유럽방위백서 주요 내용 요약

- 총 9개 장, 20여 페이지로 구성
- 1장(서론)은 전례 없이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공동방위에 투자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
- 2장(전략 환경의 급격한 악화)은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부상 등 유럽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며, 연합이 무기경쟁뿐 아니라, 기술패권 경쟁,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모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 3장(유럽방위준비태세 2030)은 2장에서 언급된 외부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럽이 2030년까지 완전한 준비태세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 EU는 회원국의 개별적 방위 노력에 더해 공동조달, 산업기반 강화 등으로 전략적 가치를 더할 수 있음. 백서는 EU 전시대비전략(Preparedness Union Strategy), EU 역내안보전략(Internal Security Strategy)와 연계될 것이라고 명시
- 4장(전력격차해소)는 유럽의 강력한 방위체계 구축을 위해 핵심적인 7개 분야*를 제시하며, 연합은 이 분야에 대해 공동조달, 기술 표준화, 산업기반 확대, 예산조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 ▲ 항공 및 미사일 방어, ▲ 포병 시스템, ▲ 탄약 및 미사일, ▲ 드론 및 드론 대응체계, ▲ 군사 이동성, ▲ AI·양자기술·사이버·전자전, ▲ 전략적 지원 전력 및 핵심 인프라 보호
- 5장(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확대)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2가지 우선순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 : ▲ 군사 형태의 지원 강화 (공동조달, 유지보수, 장비 표준화, 군사 이동 인프라 강화 등 다각적 지원) ▲ 우크라이나를 EU의 방위산업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크에 통합 (EU의 방산 프로젝트, 조달 시스템, 기술 생태계에 점진적으로 통합)
- 6장(강력하고 혁신적인 유럽 방산 산업)
 - 유럽 방위산업(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EDTIB)은 여전히 파편화·과소 투자 등 구조적 약점 보유
 - (EU의 6대 전략 방향) EU는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다음 6가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a) 산업 역량 강화	• (b) 핵심 투입요소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 (c) 단일 방산시장 조성	• (d) 규제 및 절차 간소화
• (e) 연구개발(R&D)/혁신 촉진	• (f) 인재 확보 및 전문기술 강화

- (방산 생산역량 확대)

- 공동조달강화법(EDIRPA)을 통해 수요 예측 통한 기업의 생산설비 투자 유도
- 유럽방산청(EDA)이 수요 통합 주도, 대규모 공동조달 구조화를 위한 역할 필요
- 유럽 군수판매체계(European Military Sales Mechanism) 시범 추진으로 납기 단축·가용성 향상

-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자립화)

- EU 방산 가치사슬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핵심 부품·원자재의 국산화 및 공급선 다변화
- 핵심기술 관측센터(Observatory of Critical Technologies)를 통해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급선 다변화, EDF 등 활용해 EU산 대체 기술 개발
- 제3국 기술 이전 제한, 수출통제 등의 리스크 완화 전략 추진
- 핵심 원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으로 비용 절감 및 공급 안정 확보

- (EU 단일 방산시장 구축 및 규제 표준화)

- 회원국의 방산 구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EU 외부 의존도가 높아 단일시장 구축이 시급
- 진정한 단일시장은 조달 안정성, 규모 경제, 산업 내재화에 기여
- 이를 위해 조달 절차, 제품 이전, 인증 및 허가 등의 규제 단순화와 상호인정 필요

- (파괴적 기술혁신과 민·군 기술 융합)

- AI, 양자기술, 자율시스템, 극초음속무기 등 혁신 기술의 개발 필요성
- 기술격차 방지를 위해 방산 혁신 펀드(EUDIS), 방산혁신허브(HEDI) 등 적극 활용
- 스타트업·벤처·테크기업 생태계와 방산을 연계해 민간기술의 군사 전환 촉진
- AI·양자 중심의 유럽 무기체계 기술 로드맵 수립 예정
- 혁신펀드, EIC, TechEU 펀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생태계 육성

- (전문 인력 및 기술 인재 확보)

- 기술 역량 연합(Union of Skills)을 통해 방산 분야 재교육·전환 교육 지원
- STEM 교육 강화 및 자율·사이버·HPC 등 전략 기술 분야 훈련 확대
- 타 산업에서 방산으로의 직업 전환 경로 및 유입 통로 마련 필요

● **7장(국방지출의 대폭 확대)**는 유럽재무장계획(ReArm Europe Plan)이 제시한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방비 조달을 위한 전략 제시 (<참고 2>에서 상세 설명)

- 회원국의 국방투자 지원을 위한 신규 재정 도구
- 재정규율의 국가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 공동 발동
- 기존 EU 재정 수단을 방산 투자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
- 유럽투자은행(EIB)의 방산 기여 확대
- 민간자본 유치 및 활용 확대

- **8장(파트너십을 통한 안보 강화)**는 국제기구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만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와 의존도 축소 등 유럽 방위력과 산업 역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핵심적이라는 주장
 - (NATO 및 대서양 관계) ▲NATO는 유럽 안보의 핵심이며, EU는 규제력과 재정수단으로 NATO 내 회원국 역량 강화 지원, ▲미국과의 협력을 사이버, 해양, 우주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략적 대화 구조 강화, ▲미국과의 상호 보완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대서양 방산 산업 협력 심화
 -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와의 협력) ▲영국과는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기 대응과 방위산업 협력 확대, ▲노르웨이는 EU 방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체결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 체계화, ▲캐나다와는 양자 안보·방위 대화를 바탕으로 산업·안보 협력을 심화
 -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 이웃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전체의 안정성 증진 ▲튀르키예와는 EU 가치에 대한 상호 존중을 전제로 실용적이고 상호 이익 기반의 협력 모색
 -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한국, 일본과는 기체결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안보·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 ▲호주, 뉴질랜드와의 방산 및 안보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 ▲인도와는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검토 중이며, 정례 대화를 통해 협력 기반 마련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 해양 교통로 보호, 비전통적 위협 대응 등 안보 기여 지속
- **9장(결론: 유럽 방위의 향후 방향)**은 방위력 재무장과 위협 대응을 위해 즉각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들을 제안
 - (국가예외조항 발동) 4월 말까지 국가재정규율 예외조항 발동을 요청해 지출 여력 확보
 - (SAFE 채택) 유럽 안보행동기금(SAFE) 규정안을 EU 이사회에서 긴급 채택
 - (EDIP·USI 입법화) 여름 전까지 EDIP 및 우크라이나 지원기금(USI)을 공동입법기관에서 통과
 - (지역개발기금 개정) 2025.3월까지 ERDF 개정을 통해 국방 투자 허용 기반 마련
 - (공동조달 확대) 전체 방산 조달의 40%를 공동조달 방식으로 전환
 -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확대) 포탄, 방공, 훈련·장비 중심의 신규 군사지원 패키지 구성
 - (우크라이나 통합·연결) 우크라이나 방산업 단일시장 편입 및 군사 인프라·우주 서비스 연계
 - (EIB 역할 강화) 방산 대출 기준 완화 및 자금 확대를 위해 EIB 지원 역할 강화
 - (산업 전략대화 시작) EDA 및 EUMS와 연계해 방산업계와의 전략 대화 즉시 시작
 - (규제 간소화 종합안) 2025.6월까지 방산 규제 간소화 종합 패키지 제안
 - (첨단기술 로드맵 발표) 2025년 중 AI·양자 기반 유럽 무기체계 기술 로드맵 발표
 - (군사 이동성 계획 수립) 2025년 말까지 군사 이동성 전략 수립 및 입법 제안 병행

참고 II ReArm Europe/ Readiness 2030 계획

- 8천억 유로의 국방투자 자금 조달 위한 5가지 축으로 구성
- 국가별 국방 재정 확대 지원
 - 2024년, EU의 신규 재정 프레임워크 하에 4년간 중단됐던 재정규칙 부활
 - 재정규칙에서는 일반예외조항(GEC)과 국가예외조항(NEC)이라는 두 가지 장치를 허용해 4년 동안 약 6,50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
 - * GEC: 유로존 또는 EU 전체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적용
 - * NEC: 개별 국가가 통제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처할 경우 허용
 - EU 집행위는 방위백서를 통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국가예외조항(NEC)의 발동을 제안했으며, 국방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순지출 경로의 일시적 일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
 - 이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전제로 하며, COFOG(정부기능분류)에 따른 국방 지출만 포함(GDP 대비 연간 최대 1.5%, 기간은 최대 4년까지라는 조건 포함)
 -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른 국방 관련 지출은 다음을 포함: ▲군사 장비 및 인프라, ▲이중용도(dual-use) 물품, ▲군 인건비 및 훈련비, ▲군사 원조
- 유럽안보행동(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기구를 설립해 최대 1,500억 유로 조달 계획
 - SAFE는 긴급 상황에서 EU 차원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TFEU 제122조(긴급 조항)를 근거
 - *이 조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NGEU(차세대 EU기금)를 도입할 때도 사용
 - SAFE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유럽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긴급 지원, ▲공동조달을 통해 탄약, 미사일, 포병 체계, 우주, AI, 사이버 등 핵심 국방역량을 확보
 - 공동조달은 다음 파트너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수행:
 - 두 개 이상의 EU 회원국
 - EU 회원국 + 우크라이나
 - EU 회원국 + EFTA/EEA 국가*
 - * 유럽경제지역(EEA): EU 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EU 후보국, 잠재 후보국 및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별도 협정 체결을 전제로 공공조달 참여 가능

* 한국, 일본, 노르웨이,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6개국

- SAFE에는 아래의 유럽 우선 조달 조항(European preference clause)이 포함

- 조달업체의 인프라, 설비, 자산은 EU, EFTA/EEA, 우크라이나에 위치해야 하며,
- 부득이하게 제3국 설비를 사용 시에도 EU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함
- 최종제품 비용의 최소 65%는 EU/EFTA/우크라이나산 부품이어야 하며, EU의 안보·방위 이익을 해치는 국가로부터 부품 조달 불가

- EU 후보국, 잠재 후보국,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은 EU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이 SAFE의 지원을 받은 공동조달에 참여할 경우, 위에서 언급된 유럽 우선 조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가능

- 이를 위해 양자 또는 다자 협정문 내에 어떠한 점이 위의 위치, 생산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

- 이외에 협정문에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조건, 조달 제품의 공급 안정성 관리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사항들을 요구

● 단기적으로 EU 예산을 활용해 국방 지출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표적으로 지역개발을 목표로 마련된 EU 예산 중 하나인 결속기금(Cohesion funds)의 전환을 권고

- 각 회원국이 자국 몫의 결속기금을 국방 관련 프로젝트로 전환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환 가능한 분야는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 이는 결속정책 중간 검토(mid-term review) 과정에서 전환 가능 (EU 2021/1060 제18조)

- 이외 유럽 지역개발기금(ERDF) 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자금 사용이 가능하며,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 결정을 전제로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

- 현재, 회원국들은 각 프로그램별 평가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2026~2027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 자금(flexibility amount)의 활용 계획 제시도 필요

● 유럽투자은행그룹(EIBG)의 적극적 참여 확대

- 유럽투자은행그룹(EIBG)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 추진

- EIBG 구성

- 유럽투자은행(EIB): EU 회원국이 출자한 공공 금융기관
- 유럽투자기금(EIF): EU 및 제3국의 중소기업에 금융 접근성 지원

- EU는 EIB에 국방·안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구 중
- 현재 EIB는 탄약, 무기류, 군사 인프라 등에 대한 직접 대출은 제한하고 있으나 민군 이중용도 (dual-use) 요건 충족 시 자금 지원 가능

● 민간 자본 동원

- ‘저축·투자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전략을 통해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 구조 구축을 추진
- 동 전략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 : ▲은행연합 완성 ▲자본시장연합 완성 ▲금융규제 부담 최소화 ▲역내 단일 금융시장 완성
- EU 내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 전략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다만, ESG 이슈로 은행 및 연기금 등 주요 투자 주체들이 방산 투자에 소극적인 점은 여전히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 Readiness 2030
-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 김남희(2025.4.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합작법인 설립... 유럽 현지화 본격화, 조선비즈
- 노민호(2025.3.6.), 한-폴란드 외교장관 "K2 전차 2차 계약 전력 지원" 방산협력 확인, 뉴스1
- 박기원(2025.4.2.), 한화에어로, 루마니아 공장 건설...현지 생산으로 유럽 견제 뚫는다
- 안두원(2025.2.10.), 개발 다 끝낸 K2전차 변속기 ... 규정 하나 못바꿔 국산화 늦어져, 매일경제,
- 임준혁(2025.4.2.), 현대로템, 폴란드서 꽃피운 'K2전차' 신화...중동까지 퍼뜨린다, 한스경제

- Alice Tidey (2025.4.10.) Coalition of the Willing' plans now 'well developed' but timeline, numbers still to be worked out, Euronews
- Andrew Gray (2025.3.22.), Can non-EU companies be part of EU's big defence fund?, Reuters
- Aurélie Pugnet (2024.10.1.) Frugal no more: new NATO chief Mark Rutte urges members increase defence spending, EURACTIV
- Didenur Dastan (2025.4.9.) Any possible Turkish-EU security deal must be fair, expert says, Daily Sabah
- Giselda Vagnoni (2025.3.16.) Italy prepares plan to bridge automotive and defence sectors, minister says, Reuters
- Laura Dubois, Henry Foy, Barbara Moens(2025.2.19.) Europe needs big defence players to catch up with US, says Belgian minister, Financial Times
- Linus Höller(2025.3.11.), Defense companies jack up Germany's auto industry to make weapons fast, DefenseNews
- Michael Crowley (2025.4.3.) Rubio Visits NATO Amid European Alarm Over Trump's Agenda, NYT

- 심순형, 김미정, 정재호(2022.10.31.)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 2022-08
- 윤용희(2025.4.1.), 유럽 방위백서(Readiness 2030) 주요 내용, KOTRA EU 경제통상 리포트(25-12)
- Guntram B. Wolff, Armin Steinbach, Jeromin Zettelmeyer(2025.4.7.), The governance and funding of European rearmament, Bruegel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산업 공급망, 에너지이다. 주요 논문으로 “포트폴리오투자 유입자본의 국적별 결정요인 분석” 『국제금융연구』 제11권 제1호 (2021),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4)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선임전문관

1. 배경

- 2025년 3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재래식 무기 수출(Conventional Arms Transfer, CAT) 정책을 폐지

※ CAT 정책: 1977년 카터 행정부가 미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 정책 기초를 제시하면서 처음 도입된 이래 대통령 지침의 형태로 무기 수출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과 무기 수출 결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난 행정명령 78개를 일괄 폐기한 이후 추가 취소를 단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CAT 정책이 담긴 국가안보각서 18호(National Security Memorandum, NSM-18)를 폐기
- 4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무기 수출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CAT 정책인 국가안보대통령각서 10호(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10, NSPM-10)를 복구
 - * Reforming Foreign Defense Sales to Improve Speed and Accountability (2025.4.9)
 - 동 보고서는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NSPM-10호와 연관 지어서 트럼프 무기 수출정책의 함의를 도출

2. 주요 내용

-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 수출 제도 개선을 통해 ▲동맹의 안보 역량 강화 및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 활성화의 동시 달성을 모색
 - 미국과 동맹국 간 상호 역량을 강화시키는 접근 방식을 통해 ▲건실한 美 공급망 ▲국내 생산 역량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 모색
- 정책 목표로 ▲무기 수출의 책임성과 투명성 개선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방위 산업의 재부흥 제시
 - (책임성과 투명성)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해외 협력국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산 무기 제공을 위한 절차 간소화 추진

-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의 경우 관련 기관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른 기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순차 승인(sequential decision-making)이 아니라 각 기관이 동시에 결정하는 병렬 승인(parallel decision-making)으로 신속히 처리

※ 미국의 무기 수출은 美 정부와 상대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와 美 기업과 상대 정부 간 직접상업판매(Direct Commercial Sales, DCS)로 구분하며, 美 정부는 전투기를 비롯한 특정 무기는 FMS로만 판매

- **(규제 완화)** 무기 수출 계획, 실행, 모니터링과 관련된 규칙을 줄이고 미국 외교 정책 목표와의 일치성 확보
- **(방산 재부흥)** FMS 실행 시 비용 및 기간 감축을 위해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고려한 무기 설계 ▲구매국에 금융 지원 개선 ▲계약 유연성 증대를 통해 미국 방위 산업의 해외 경쟁력 촉진

■ **국무부 및 국방부 장관에 지체없는 이행을 지시하면서, 우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기 수출 정책이 담긴 NSPM-10호 복구**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CAT 정책(NSM-18호, 2023.2.23.)을 폐기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경제안보에 더 중점을 둔 NSPM-10호(2018.4.19.) 재시행
-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레짐(MTCR)의 카테고리 I 품목에 대한 규제 재평가 및 특정 파트너국에 대한 공급을 검토
 - ※ MTCR은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전달 시스템의 확산을 통제하는 35개국 간 비공식 협정이며, '카테고리 I(Cat. I)' 품목은 "강력한 거부 추정(strong presumption of denial)" 적용
- 무기 수출의 의회 승인(congressional notification) 기준을 상향하도록 제안하는 공동 서한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승인의 적시 확보를 위해 의회와 협력
 -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무기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매 승인서(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LOA)를 판매 대상국에 발급하기 전 의회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 / 구체내용은 표 참고

[무기수출통제법 상 미국 정부의 의회 보고 기준]

구분	기준 판매액(단위: 미국 달러)					
	판매 형태	보고 의무	중요군사장비	군수품	설계·건설	총기류
NATO+5국*	FMS	15일 전	2,500만	1억	3억	-
	DCS	15일 전	2,500만	1억	-	100만
여타 국가	FMS	30일 전	1,400만	5,000만	2억	-
	DCS	30일 전	1,400만	5,000만	-	100만

*5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자료: Kerr (2025)

- 일각에서는 美 의회에서 제기된 TIGER 법안을* 근거로 신규 기준 판매액을 전망하고 있으며, 동 법안에 따르면 신규 기준 판매액은 ▲1,400만→2,300만 달러 ▲5,000만→8,300만 달러 ▲2,500만→4,200만 달러 ▲1억→1억 6,600만 달러 ▲2억→3억 3,200만 달러 ▲3억→5억 달러 등으로 상향 가능

* Foreign Military Sales Technical, Industrial, and Governmental Engagement for Readiness Act

■ **우선 협력국(priority partners)을 식별하고, 무기 수출을 통해 동맹 간 부담 분담(allied-burden sharing) 증대를 달성**

- ▲무기 수출 대상 우선 협력국 목록 및 ▲식별된 우선 협력국에 수출할 수 있는 우선 최종 품목(priority end-items)* 목록을 작성(60일 내, 6.8.) / 목록은 매년 갱신

* 동 행정명령 상 최종 품목은 조립이 완료되어 지급 또는 배치할 준비가 된 최종 제품을 의미

- 우선 협력국에 대한 우선 최종 품목의 수출이 미군의 준비태세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수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동맹의 부담 분담 증대를 달성
- 이를 위해 동맹국에 최종 품목의 생산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동맹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임무 수행 능력(capability targets)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고려
- ▲FMS 한정 목록(the FMS Only List) ▲미 군수품 목록(US Munitions List)을 기술 보호 관점에서 검토·수정하고 FMS 한정 목록에 품목을 추가하는 명확한 기준 수립

- 그 밖에 무기 수출 개선 계획(▲투명성 개선 ▲수출 가능성* 확보 ▲기술 보안과 대외 공개(수출) 절차 통합)을 90일 내(7.8.) 제출하고 ▲방산 기업의 모든 DCS 수출 허가 신청 그리고 FMS 진행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일 전자 시스템 개발 계획을 120일 내(8.7.) 제출

* 수출 가능성(exportability)이란 미국 방위 체계의 획득 초기 단계에서 핵심 기술, 역량, 프로그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기능을 식별, 개발,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동맹국에 대한 신속한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

3. 합의

■ **이번 트럼프 무기 수출 행정명령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 정책 기초를 동맹에 대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로 전환하고 인권 보호 등 규제는 완화**

- 바이든의 무기 수출정책은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반인륜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more likely than not)”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거버넌스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대도 추진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수출정책 시행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계속 지원하는 등 인권을 중시한 무기 수출규제 기초의 한계를 노정(Yousif & Stohl, 2025)

-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군사적 우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방증(Sheline, 2025)

- 트럼프의 무기 수출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결합된 특성을 보이며, 무기 수출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동맹국이 핵심 방위 품목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모색

- 미국의 무기 수출의 신속한 절차를 위해 도입하는 병렬 승인(parallel decision-making)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과 국무부의 정치군사국(Bureau of Political-Military Affairs) 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검토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Lee, et. al. 2025)

■ 미국은 신속한 무기 수출을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 요건 완화(무기 판매액 기준 상향) 및 수출 가능성 정책을 추진

-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상 적용되는 미국 정부의 의회 보고 기준은 1981년에 개정된 것으로 의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

- 美 하원 외교위원회는 Tiger Task Force* 보고서(2024.2.7.)를 통해 중국과 경쟁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한 무기 수출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수출 지연 및 투명성 부족으로 동맹이 다른 국가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미국 방위 산업의 이익이 희생된다고 문제 제기

* TIGER Task Force: 2023년 6월 美 하원 외교위원회(마이클 맥클 위원장)가 미국 FMS 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마이클 월츠 의원이 주도하고 이후 TIGER 법안을 마련

-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 수출 개선 계획을 마이클 월츠 현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토록 한 바, 기존 의회의 논의가 유사하게 제시될 전망

- (기준 상향) 변경된 상한 기준에 따른 해당 무기 수출 건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불필요해지면서 물가상승 요인 및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

- (수출 가능성) 무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함으로써 무기 수요 국가 맞춤형 모듈 구성 및 소프트웨어 설계 등 무기 생산 과정의 변화도 예상(Nikolov, 2025)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PM-10호를 재시행함에 따라 경제안보 추구 및 미국 방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도 예상

- NSPM-10호는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역량있는 동맹국 ▲역동적인 방위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분야로 보면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목표뿐 아니라 경제안보 달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적시

-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무기 수출 결정 시 미 행정부는 미국 산업 및 방산 기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고, 구매 대상국이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제3의 공급자에게 무기를 획득할 능력도 검토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방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치고 미국 기업의 수출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단 의회의 감독 우회로 인한 무분별한 무기 수출로 미국의 평판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미국의 무기 수출 절차 간소화는 동맹국 지원뿐만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달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기회와 도전이 혼재

- 무기 수출 절차의 간소화는 미국산 첨단 무기의 조기 인도로 우리 방위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을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산 무기의 수출 가능성 정책이 구매자 맞춤형 무기 설계를 지향함에 따라, 한미 양국 간 공동개발·생산 등 동맹국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 안보 전략 실현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제안보 달성을 모색할 기회

-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부담 분담을 증대시키는 방편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자국 방산 제조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무기 수출 증가 및 경쟁 심화도 가능

※ 한국 방산은 2023년 매출 23.3조원, 수출 4.8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중동, 동유럽 등에 대한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매출도 2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글로벌 위상 상승(장원준, 2025)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 수출을 가속화하면 기존에 미국이 자제해 오던 중동 지역 등에 대한 무기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 우리 기업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 필요

-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대한 즉각적인 무기 수출을 위해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는 비상사태 조항을 발동하고 美 의회의 무기 수출 금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2025년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비상사태 조항을 발동(Kerr, 2025).

참고문헌

- Kerr, Paul. K. (2025). Arms Sales: Congressional Review Process. RL3167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Lee, Nooree, Frederic Levy, Martin Levy. (2025). New Executive Order Targets Reforms to Foreign Military Sales. Inside Government Contracts. Covington.
- Nikolov, Boyko. (2025). Trump’s New Defense Sales Reform Risks Tech Leaks to Rivals. BulgarianMilitary.com.
- Sheline, Anelle. (2025). Under Primacy, Weapons Sales Will Always Supersede Human Rights. Quincy Brief. Quincy Institute.
- US Congress Foreign Affairs Committee. (2024). Foreign Military Sales TIGER Task Force: Report. 2024.2.7.
- White House. (2025). Reforming Defense Sales to Improve Speed and Accountability. Executive Orders.
- Yousift, Elias, Rachel Stohl. (2025). Policy Void: What Trump’s Rescinding of the U.S. Conventional Arms Transfer Policy Means. Commentary. Stimson Center.
- 장원준. (2025). [장원준 칼럼] K-방산, 2025년을 ‘13대 국가주력산업’ 진입의 원년으로. 2025.1.6. 뉴스투데이.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전문관

※ 원문 : Matthew P. Funaiolo, Brian Hart, Aidan Powers-Riggs. (2025.3.) “Ship Wars: Confronting China’s Dual-Use Shipbuilding Empire”. CSIS.

1. 중국 조선산업의 안보적 위협 : 이중용도(dual use) 구조의 작동 방식

■ 중국의 조선산업은 민간 부분의 상선 건조 역량을 기반으로 해군 전력을 확장하는 군민융합 (Military-Civil Fusion) 구조로 운영중

- 중국은 조선 분야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최첨단 군함을 대량 생산 중이며, 중국 내 조선소 중 상당수가 중국군과 직접적으로 연계
 - 중국 조선소의 선박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425척의 함정을 운용할 예정이며, 이는 미 해군(300척 예상)의 함정 수를 압도
 - 특히, 중국선박집단(CS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대기업으로 84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주요 전투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담당

*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연구 개발 등 사업 분야에 걸쳐 20만 명 이상의 직원 고용

[군사 연계 수준에 따른 중국 내 조선소(307개) 분류]

구분	내용
Tier 1(매우 높은 위험)	해군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CSSC(중국선박집단) 계열 조선소
Tier 2(높은 위험)	군사 프로젝트와 인력 교류가 있는 상선 위주의 CSSC 조선소
Tier 3(중간 위험)	CSSC 외 국영기업 소속 조선소로 군사동원 가능성 존재
Tier 4(낮은 위험)	민간 또는 외국 소유이나, 중국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조선소

■ 중국 조선산업의 군민융합 구조 고려시, 중국 조선사와 해외 기업 간 거래 및 협력은 간접적으로 중국 해군 현대화에 기여 가능

- (자본 제공) 중국군과 연계된 주요 조선업체들은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의 자금 수혈을 통해 제조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중국 해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 상존

- 중국 해군과 연계성이 높은 Tier 1, 2 조선소에서 외국 선주들의 구매 비중은 약 72%에 달하며, 주요 외국 기업 및 동맹국(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프랑스 등)이 Tier 1, 2 조선소에서 선박을 대량 구매
- CSSC는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ETF(예: MSCI China, iShares China) 편입을 통해 미국 자본이 지속 유입
- (핵심 기술 이전) 독일, 일본 등 미 동맹국의 핵심 부품업체와 중국 조선소 간의 협력(공동투자, 라이선스, 엔진 납품 등)을 통해 중국 조선소에 첨단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상존
 - 독일 엔진 제작회사 MTU는 핵심 구축함 및 잠수함에 사용된 디젤 엔진 기술을 중국 조선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일본 미쓰비시 등은 가스터빈 기술이전을 통해 중국의 함정 추진시스템 고도화를 간접적으로 지원

■ **글로벌 조선 산업에서 중국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 확장 대한 미국의 역지력을 약화**

- 현재 글로벌 선박 수급은 중국 조선산업의 공급망에 구조적으로 의존 중이며, 이는 미국과 美 동맹국의 선박 제조역량 저하를 유발중
 - 2033년까지 전체 선박 주문량의 약 62%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LNG선 전체 수주량의 30% 이상, 컨테이너선의 80% 이상을 중국 조선소에서 생산할 전망
 - 미국의 상선 제조역량은 사실상 소실*되었으며(글로벌 점유율 0.11%), 중국 조선업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도 하락 추세
 - * 2014년에서 2024년 기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0.33%에서 0.11%로 감소했으며, 2010년 이후 최소 3개의 미국 주요 조선소(벤더 조선소, 애번데일 조선소, 앨라배마 조선소)가 운영을 중단
 - ** 2024년 한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 아래로 하락한 반면 중국의 LNG 탱커 수주 점유율은 2020년 14%에서 2024년 32%로 증가
 - *** 최근 몇 년 동안 스미토모 중공업, 미쓰이 E&S, 사세보 중공업을 포함한 여러 주요 일본 조선업체는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로 인해 조선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
- 조선산업에서의 거대 제조역량을 기반으로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의 변화를 유발중
 - 중국 해군은 함선 수에서 미 해군을 추월했으며, 함대 톤수와 수직 발사 시스템(VLS)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도 미 해군과의 격차를 빠르게 축소 중
 - 중국은 유사시에 상선 제조역량을 군사 보급, 군용품 수송, 군함 생산량 확대, 침몰 및 손상된 군함의 복구 및 교체 등에 활용 가능

2. 정책 제언 : 경제 · 군사적 측면을 고려한 조선산업 정책 수립 필요

■ 조선산업은 이중용도 산업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 필요

- 이중용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정립과 동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억지력과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 단기적으로 중국 조선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재건 필요

- (단기) 중국 조선사에 대해 ▲입항 수수료(docking fee) 차등 적용 ▲CSSC와의 금융·기술 네트워크 차단 등을 통해 중국 조선소에 외화 유입을 차단

- (수수료 부과)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건조 상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docking fee)를 부과

- (중국 조선사의 금융 및 기술 네트워크 차단) 미국 기업과 CSSC가 소유한 35개의 1급 및 2급 조선업체의 금융 거래 제한

- (중국 조선소 동향 모니터링 강화) 중국 조선소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추가 조치 여부 평가

- (중국 조선소와 해외 국가의 연계 제한)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조선 관련 논의를 포함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미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소와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장려

- (장기) 미국과 美 동맹국의 조선산업 기반 회복 및 전략적 제후 확대

- (조선 산업에 장기 투자) 중국 건조 상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docking fee) 수입을 미국 조선 산업 재건 재원으로 활용하여 미국 내 조선 역량 구축

- (외국인 투자 유치) 조선 분야의 주요 글로벌 기업, 특히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조선업체 투자 장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전문 지식, 자본의 유입을 도모

- (중국 외 지역의 조선 역량 구축) 미국 또는 일부 협력국에서 건조된 신뢰할 수 있는 선박 목록 등을 통해 중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여 간접적으로 동맹국의 자국 조선 역량에 대한 투자를 장려

- (전략 선종 분야의 협력 강화) 전략적 용도에 필요한 특수 조선 기술 개발을 위해 동맹국 간 직접 협력* 강화

* 관련하여 2024년 7월 미국, 캐나다, 핀란드는 ICE 협정을 통해 선박선 분야의 정보 및 전문 지식 교환을 촉진 등을 통한 3국의 조선 기술 역량 강화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4.2.~2025.4.16.)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트럼프 대통령, “美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서명(4.9)

- (개요) 조선·해운업 및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향성 제시 목적으로 ▲관련 전략·법안 마련 ▲기존 법령·절차 개선 검토 등 지시
- (동맹국 활용) ▲동맹·파트너를 통해 ‘적’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감소 ▲무역정책 공조(align)를 위한 동맹·파트너 국가에 대한 협의
 - 미국의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동맹국 조선업계의 對美 자본 투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 90일 내 제안
 - * 별도 조항에 ‘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 ‘美 상선단 확대’, ‘금융지원’ 등 관련 법안 제출 지시
 - 동맹·파트너·유사입장국이 상기 對中 및 항구 관련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 협의 / 동 계획 및 진전사항 보고
- (불공정 행위 대응) USTR측이 결정하는 對中 조치* 관련, ▲추가 정보 수집 ▲법무부, 국토안보부 협력 下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한 절차 진행
 - * USTR, 中 조선·해운 불공정 행위 조사결과 발표(1.16) 후 제재 조치 검토 중 / 中 선박·선사 등 대상 고액 입항료 / 美 상품 수출시 美 국적선 사용 의무화 등 제안
 - 캐·맥 우회를 통한 美 항만유지세 등 회피 예방에 필요한 조치 검토

■ 중국 정부, 美 추가관세 위협에 대한 재보복 조치* 발표(4.9)

- * 4.4 中측이 미측 상호관세에 대응해 對美 34% 추가관세 부과한데 대해 미측은 4.8까지 동 조치 未철회시 對中 50% 관세 추가를 공언 → 中측은 동 위협에 보복조치 시행
- (보복관세)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총 84% 추가 관세 부과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추가) 6社(대만向 무기판매 등 방산기업) 추가
 - (수출금지 기업 지정) 12社(바이오, 방산기업 등)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시행
 - (WTO 제소) 美 50% 보복관세 부과 조치(4.8)를 WTO에 제소

■ 美 상무부, 반도체 ·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4.1.) 관보 공지(4.14)

- (조사 대상)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SME), 관련 파생 제품(derivative products), ▲의약품과 그 원료
- (일정) 규정(270일) 보다 빠른 시일 내(1-2개월) 조사 결과 발표 전망
 - ※ 러트닉 상무장관은(4.13)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 발언

■ 트럼프 대통령, 핵심광물 대외 의존 관련 232조 조사 행정명령 서명(4.15.)

- (조사 대상) ▲핵심광물 ▲가공된 핵심광물(processed critical minerals) ▲파생 제품(derivative products)*
 - * 핵심광물을 가공한 모든 제품으로 반가공제품(반도체 웨이퍼)부터 최종 제품(영구 자석, 모터, 전기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핸드폰 등) 포함
- (일정) 상무부 장관은 180일 내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 대통령 앞 제출

■ USTR, 中 해운사 및 해외 자동차 운반선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4.17)

※ USTR Section 301 Action on China's Targeting of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for Dominance(`25.4.17)

- (입항 수수료) ①中 해운업체 ②중국산 선박 이용업체 ③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美 항구 입항 시 수수료 부과
- (美 선박 의무화) 美 LNG 수출의 일정 비율을 美 선박(美 건조 + 美 국적 + 美 운영) 이용 점진적 의무화(`28년부터 `50년까지 점진적 증가)
- (中 항만 장비 관세 제안) Ship-to-Shore(STS) 크레인에 대해 최대 100% 관세 / 항만 장비(컨테이너, 샤시(chassis) 등)에도 관세 부과 검토*

*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조치로 관련 의견수렴 절차(~5.19일) 진행 예정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4.3.	[관세] 상무부 대변인, 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한 담화문 발표 :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단호히 반대 및 자국 권익 보호를 위한 반격 조치 경고
	4.4.	[관세] 정부, 美 상호관세 대응 조치 발표 : ▲對美 관세·비관세 조치 발표 ▲희토류 7종 수출 제한 즉각 시행 등
	4.9.	[미중관계]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와 관련한 일부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제하 백서 발간
	4.9.	[관세] 정부, 美 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 발표 :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율 34%→84% 상향 조정 ▲WTO 추가 제소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 ▲6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 * 미국이 50% 추가관세를 포함하여 총 104% 對中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국가	일자	내용
중국	4.11.	[관세] 정부, 美 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 발표 :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84%→125% 상향 조정(4.12일부터 조정 적용) 및 WTO 추가 제소 * 미국이 중국에 125% 상호관세를 부과(4.10)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
	4.12.	[반도체] 中 반도체산업협회(CSIA), 웨이퍼 제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제시 : 패키징 공정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집적회로 제품의 수입통관 시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 공장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
	4.14.	[수입제한] 정부, 자국 항공사에 美 보잉사 항공기 인수 중단 명령 : 자국 항공사에 미국 회사에서 항공기 관련 장비나 부품 구매 중단도 요구
	4.14.	[심해 광물] 중국, 미국의 태평양 대륙붕 채굴을 통한 심해 광물 비축 계획 행정명령 가능성 보도(4.1)와 관련하여 국제법 준수 촉구
미국	4.3.	[관세] Chuck Grassley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및 Maria Cantwell 상원의원(민주/워싱턴), 무역 검토 법안(Trade Review Act)* 발의 : Don Bacon 하원의원(공화/네브라스카), 하원 동반법안 발의(4.7.) * 행정부의 신규 관세 도입 시 48시간 이내에 의회 통보 등 의회의 승인을 요구
	4.7.	[관세]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4.8일까지 보복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4.9일부터 50% 추가 관세 부과 경고
	4.8.	[관세] Hassettt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한국·일본 등 동맹 및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언급
	4.8.	[관세] 하원, 국가긴급상황 종료 합동결의안 발의
	4.8.	[바이오] 미 의회 상원 신항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NSCEB) 「바이오기술의 미래 (Charting the Future of Biotechnology)」 보고서 발표
	4.9.	[바이오] 미 상하원, 국가바이오기술이니셔티브법안 발의 *National Biotechnology Initiative Act of 2025
	4.9.	[방산] 트럼프 대통령, 美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출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 Reforming Foreign Defense Sales to Improve Speed and Accountability
	4.9.	[해양]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해양 지배력 재건 행정명령* 서명 *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4.9.	[IRA] 공화당 상원의원(4인),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촉구 서한 발송
	4.9.	[관세] 민주당 하원의원(26인), Greer 무역대표 및 Lutnick 상무장관 앞 의약품 대상 관세 반대 공동서한 전달
	4.10.	[관세] 백악관,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펜타닐 유입 관세 20%를 포함해 145%라고 확인
	4.10.	[관세] 와이드(Wyden) 상원 재무위 간사(민주/오레건), 국가긴급사태(National Emergency)* 종료 합동결의안(S.J.Res.49) 발의
4.10.	[관세] 하원 세입위 민주당 전원(19인), 「불량 대통령 저지 법안*」 발의 : (주요 내용) ▲4.2. 발표한 전세계 대상 상호·기본관세를 규정한 행정명령 폐지 ▲펜타닐 유입, 불법 이민 등을 이유로 멕·캐에 관세를 규정한 행정명령 폐지 등 * Stopping a Rogue President on Trade Act	

국가	일자	내용
미국	4.11.	[관세] 백악관·세관국경보호국, 스마트폰, 반도체 모듈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 발표
	4.14.	[우주]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4.14.	[관세] 상무부,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4.1~) 발표 : (주요 내용)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제품(derivative products)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
	4.14.	[관세] 베센트(Bessent) 재무장관, 최우선 관세 협상국으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언급
	4.14.	[관세]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검토 시사
	4.15.	[관세] 대중국 관세율이 최대 245%라고 확인
	4.15.	[수출통제] 엔비디아(H20), AMD(MI308), 인텔(Gaudi) AI 칩 對중국 수출통제 시행
	4.15.	[핵심광물] 트럼프 대통령, 핵심광물 대외 의존 232조 조사 관련 행정명령 서명 ※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ions」 : (적용 대상)▲핵심광물 ▲가공된 중요 광물(금속, 금속분말 등)▲파생 제품* 등 * 반가공제품(반도체 웨이퍼), 최종 제품(영구 자석, 모터, 전기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핸드폰 등) 포함
	4.16.	[반도체] 미 하원 중국특위, Nvidia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 개시
	4.16.	[핵심광물] 미국-사우디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 구축 관련 고위급 회담 개최 : 크리스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 사우디 방문(4.13.)하여 ▲전기차 관련 광물의 중요성 및 투자 기회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체계 마련 등을 논의
일본	4.1.	[경제안보]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일부 개정법 시행 : 기간인프라제도 대상사업에 일방향만운송사업 추가
	4.3.	[관세] 日 경산성, 美 관세 관련 특별 상담 창구 설치 및 자금 지원 실시 : ▲세이프티넷 대출* 요건 완화 ▲일본무역보험에 의한 자금 조달 등 지원 * 일본정책금융공사 등이 외적 요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
	4.7.	[전기차] 도요타, 2027년까지 전기차 15종을 개발하고, 기존 생산거점(일본, 중국)에서 미국·태국·아르헨티나에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하여 생산 확대
	4.16.	[관세] 일본-미국 첫 관세 협상, 조기합의 의견 일치
EU	4.1.	[자동차] 집행위, 신규 승용차·경상용차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 발표 :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에 유연성 부여
	4.1.	[철강] 집행위, EU 철강세이프가드조치 조정(4.1~)
	4.7	[관세] 집행위, 對美 자동차 및 산업 제품 상호 무관세(zero-for-zero) 제안
	4.8.	[제재] 제5차 EU 제재 조정관 포럼(Sanctions Coordinators Forum) 개최(브뤼셀) : 對러시아 제재 이행 현황 및 향후 공조방안 논의
	4.9.	[관세] 집행위,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승인 :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보복관세 순차적 부과 예정

국가	일자	내용
EU	4.9.	[인공지능] 집행위, 인공지능 행동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 발표 : (주요 내용) ▲대규모 AI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향상 ▲알고리즘 개발 및 EU의 전략적 부문에 AI 도입 촉진 등
	4.10.	[관세] 집행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관련, 對美 보복 관세 부과 일시 중단 발표 : 철강·알루미늄 관세 보복조치 90일 유예 결정
	4.15.	[공급망] 집행위원장, CPTPP와 긴밀히 협력할 의사 표명
	4.16.	[관세] 집행위, 미국과 첫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상호 무관세 요구 및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의 글로벌 공급 과잉에 공감
캐나다	4.3.	[관세] 정부, USMCA 미적용 미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 25% 보복관세 부과 입장 발표
	4.3.	[자동차] 스틸란티스社, 4.7일부터 2주간 원저 조립공장 가동 중단 예정 발표
독일	4.7.	[환경] 독일 내 유로6* 환경규제기준 충족 차량 비중 53%로 증가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일산화탄소 1.5g/kWh 이하, 입자상물질 0.01/kWh 이하 등 산정 기준
	4.9.	[전기차] 폭스바겐, 1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 두 배 증가
	4.9.	[이커머스] 독일소매업협회(HDE), 연방카르텔청에 테무 제소
스위스	4.3.	[관세] 스위스 연방각의, 미국 상호관세 발표 관련 對美 보복 조치 보류
브라질	4.2.	[관세] 하원, 美 관세 발표 후 '상호주의 법안' 긴급 승인 : 브라질 제품에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블록에 대해 정부의 보복 권한 부여
	4.8.	[해양] UN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브라질의 적도해안 대륙붕 확장 승인(3.26) : 브라질 대륙붕 약 36만㎢ 해양 면적 확장 / 가스, 원유 등 자원 개발 가능성
칠레	4.1.	[협정] 칠레-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선언
	4.16.	[광업] 칠레광물공사(ENAMI) 지배구조 개혁 법안 발의(3.12)
호주	4.7.	[선박] 중국 연구선 호주 남부 해역 출몰(3.31.) : ▲해저 군사 센서 기능 확인 ▲해저케이블 위치 및 취약성 확인 등을 중국 측의 의도로 분석
인도	4.1.	[관세] 정부,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 고려
카자흐스탄	4.2.	[광물] 산업건설부, 중동부 카라간다주에서 2,000만톤 희토류 금속 매장지 발견 발표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4.7.	[수소] 캘리포니아 연방 상·하원 의원(49인), Wright 에너지장관 앞 서한을 통해 ARCHES* 등 수소생산 허브에 대한 예산 지원 유지 촉구 * Alliance for Renewable Clean Hydrogen Energy Systems
	4.9.	[석탄] 트럼프 대통령, 석탄 산업 활성화 포함 에너지 행정명령 4개 서명 : ▲美 청정 석탄 산업 재활성화 ▲美 전력망의 신뢰성 및 보안 강화 ▲정부의 고도한 에너지 규제 개입 방지 ▲특정 고정형 에너지 원천 규제 완화
일본	4.9.	[LNG] 일본 내 최대 발전사 JERA,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조달 장기적 확대 방침 표명 : 멕시코만 지역 수입 확대 추진 예정
	4.15.	[LNG] 정부, 미국과 관세에도 협상 알래스카 LNG 참여에는 신중한 태도 유지
루마니아	4.4.	[디젤] 루마니아 콘스탄차항, 흑해·지중해 최대 디젤 수입항으로 부상 : 콘스탄차항 디젤 수입량 2021년 160만 톤 → 2024년 440만 톤(2.5배 이상 증가)
호주	4.8.	[가스] 호주 연방 야당, 가스 정책 공약 보고서* 발표 * Assessment of Coalition gas policy protocols
러시아	4.3.	[원유] 석유 수출항 2곳의 수출통제 및 美 관세 부가 가능성 등으로 유가 상승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